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안 폐지

나인권 도의원, 조례 내용 포함 유통체계시스템 위한 농산물 이용촉진·직거래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나 의원은 "고품질 농산물 등 전북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직거래를 통해 과다한 유통비용을 줄여 농민의 소득증대 및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했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농민들의 노력이 제 값을 받는 유통시스템과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역동적인 대응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들과의 많은 논의 끝에 조례를 제정해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방안을 조례에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참여주체의 역할,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협의회 설치, ▲상생협력사업,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등이다.

특히, 이 조례는 '전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로컬푸드 조례에 담고 있던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인 유통체계시스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고비용 유통구조 개선과 도농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인권 의원은 "농민의 땀이 소득으로 보장 받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직거래를 통해 적정가격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구조가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제도적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교육환경 개선·수련 프로그램 내실화 필요'

도의회 교육위, 임실초 전북학생수련원 방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현지의정활동으로 임실초등학교를 찾아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27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현지의정활동으로 임실초등학교와 전북학생수련원을 방문했다.

이날 당초 계획됐던 전북학생수련원과 더불어, 교육위 소속 최영일, 최영심 의원의 긴급제안으로 임실초 방문이 추가돼 진행됐다.

임실초 현장에는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도교육청, 임실초 관계자 및 학부모가 참석해 학교 내 환경개선에 대해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위 의원들은 "현재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임실초의 교육환경 개선 등 증개축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최근 장마철 폭우로 학교 일부에서 발생한 침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실초 학부모들은 "학교에 방문해 주신 교육위 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전북학생수련원 '에코밸리 모험센터'를 방문해 센터와 기타 시설들을 점검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적지 않은 예산 투입으로 준공을 앞둔 시설들이 더운 여름에도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도내 학생들에게 선물 같은 체험 공간이 되는 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체험시설이 완공된 후에도 다양한 체험활동이 증대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수련프로그램을 마련·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생수련원 에코밸리 모험센터의 주요체험으로는 '포레스트어드벤처', '직선형 집와이어', '곡선형 집와이어'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재까지 총 75억여 원이 투입됐다. /유호상 기자

"고창 갯벌,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환영"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1)이 "고창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고창 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확정했다"며 "고창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연유산, 인류무형유산, 생물권보전지역을 보유한 대한민국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고 밝혔다.

성경찬 의원은 특히, "생태계 보물창고인 고창갯벌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갯벌 보전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유네스코 지정 유산들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경찬 의원은 전북도 및 고창군 관계 공무원과 적극 소통하며, 등재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하는 등 고창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유호상기자

"국회,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해야"

국주영은 도의원, 한반도 종전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68년간 지속돼 온 정전체제를 종결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이 되는 7월 27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주영은(전주9)의원은 남, 북, 미, 중 등 관련국들이 협의해 조속히 종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주 의원은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은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조차도 선언 비준 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남과 북이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주문하면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았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2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한반도 종전 평화 서명운동에 동참해 서명식을 펼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 대표도서관' 활성화 위한 타지역 벤치마킹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충남도의회·내포신도시 방문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용)는 27일 충남도의회와 내포신도시를 방문했다.

이날 '공공기관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충남도의회 김형도 의원으로부터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최근 충남도의회가 발의한 공공기관 조속이전 촉구결의안을 살피며,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특위위원들은 성공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평가받는 충남 도서관을 방문해 전북혁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전북도 대표 도서관'의 운영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충남도의회도 지난 23일 전북혁신도시를 방문해 이전기관별 지역발전기여 내용과 전북도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청취하는 등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의회 간 상호교류가 활기를 띠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전북도의회 '제2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그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임원진과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 청취를 위한 정세균 전국무총리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조동용 공공기관유치지원 특별위원장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도시 시즌2, 메가시티 구상, 뉴딜정책' 등 국가균형 발전정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될 것"이라며 "전북도와 파트너십을 갖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전북 몫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27일 충남도의회와 내포신도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주요 피서지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 막아야"

김이재 도의원

전북도 전역에 사회적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주요피서지에 대해 방역수칙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최근 국내확진자 중 비수도권 발생 비율이 40%대까지 치솟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이후 나타난 '풍선효과'이기 때문이다"면서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지역과 마찬가지로, 도내 전지역에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계곡과 해수욕장과 같은 도내 주요 피서지에서 노마스크, 사적모임 허용인원초과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자칫 코로나19 확산의 근거지가 될 수 있어 전북도가 시·군과 협력해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재 의원은 28일 전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언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미래 국가비전 담은 정책대결로"

이재명 지지 호남 교수 모임

전북 도내교수를 비롯한 광주·전남의 이재명을 지지하는 호남지역 교수모임은 2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주의에 매몰된 퇴행적 네거티브 논쟁을 중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정책대결로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영·호남의 '지역감정'은 군사정권과 신군부의 후예들, 그리고 일부의 정치권 인사와 지역 토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확대 조장해 왔던 낡은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소년공 시절, '5·18 광주 민주항쟁' 시기 광주시민을 '폭도'라고 불렀던 것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광주시민의 숭고한 생명을 대가로 대한민국의 민주역량이 커지게 된 사건이 바로 '광주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이를 계기로 광주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채 의식으로 인해 공적인 삶을 살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과거 군사정권이 영·호남을 분할해 지배함으로써 호남지역은 이중의 차별을 받았고, 특히, 전북지역은 광주·전남에 비해 더욱 차별의 정도가 심해 지금의 지역소멸을 가져오게 됐고, 그 차별정책에 활용된 것이 지역주의의 망령이었음을 이지사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지역 교수모임은 마지막으로 "대선국면을 맞아 혹시라도 후보자들이 과거 암울했던 시기에 활개 치던 '지역주의' 악령에 기대는 일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고, 왕성한 정책대결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호남지역 교수모임의 공동상임대표는 고규진 교수(민교협 전북대 지회장), 고두갑 교수(목포대), 김선광 교수(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형 교수(전 조선대 부총장), 김한석 교수(전 순천청암대 총장직무대리), 박대환 교수(전 조선대 교수협의회 의장), 송광인교수(전주대), 오병수 교수(전 전남대교수), 원용찬 교수(전북대), 최광수 교수(우석대)가 맡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완주군의회에서 제265차 월례회를 열고 전북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 수소특화 국가산단, 국가 신발전 동력"

도 시군의회의장협, 월례회서 조성 촉구

강동화 회장 "전북 발전의 획기적 전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는 27일 완주군의회에서 제265차 월례회를 열고 전북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북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전북은 수소경제 선도지역으로 새만금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와 완주의 대용량 수소저장용기 산업과 지난 3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로 대한민국 수소 산업을 이끌 잠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전북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은 그린 뉴딜 등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전북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동화 회장은 "전북 수소특화 산단 조성은 전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이자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100년 먹거리 산업 육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완주 수소시범도시, 전주기 밸류 체인이 구축된 전북 수소 인프라 육성을 토대로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그린 뉴딜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자"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문민원 담당관제도 도입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앞서가는 선진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전문민원담당관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정읍시의회에 청원 등의 민원 업무처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실에 마련된 전문민원담당관이 운영하고 있는 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와 연계하고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의회 전문민원담당관 민원 창구는 27일부터 업무가 개시된다.

/정읍=김대환기자